

전남도, 친환경농업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박차

온실가스 저감 농산물에 인증 부여 올해 6160ha 인증 전국 1위 목표 오는 21일까지 한국농기원에 신청 “에너지 절감...유기농 중심 전환”

전남도가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

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 2024년 12월 현재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660ha로 전국 4위(11.7%)다.

전남도는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

물 재배, 제조용 생물자원 등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6160ha(기존 1660ha·신규 450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로, 상반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 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건 당 100만원으로 100%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농업도 예외일 수 없고,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남이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친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액은 2020년 553억 원에서 2023년에는 82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인권 증진·공동체문화 조성’ 지원

인권단체 협력사업 수행단체 모집

광주시는 시민과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인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단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권취약분야에 대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기획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뉘어 공모한다.

기획분야는 △인권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및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 △‘2023~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인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 시민공간, 빈곤과 불평등’ 관련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인권감수성 함양 교육 사업이다.

일반분야는 △인권취약계층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도시 조성 및 광주인권현장 확산을 위한 사업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 사업이다.

올해는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단계 상호간 교차 사업평가를 실시해 사업 목표와 목적에 맞는 진행여부, 홍보현황 등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단체 협력사업 행사·회의에서도 일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친환경도시 전환에 참여할 방침이다.

사업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있고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광주시 인권평화과(062-613-4771)로 하면 된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시민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인권증진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축사 화재 예방 전기안전 특별교육

시·군소방서·전기안전공사

전남도는 겨울철 전기적 원인에 따른 축사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별로 전기안전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겨울철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 과다 사용으로 겨울철 화재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축사의 경우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대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업체를 구성해 겨울철 축산농가의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발생한 축사 화재 사례 안내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전기 관련 시설 점검 및 관리 요령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119 신고요령 등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자치구-보건환경연, 환경업무 협력 강화

먹는물 등 7대분야 환경검사 간담회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7대 환경분야에 대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원은 먹는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 토양, 공공하수 등 7대분야 ‘환경검사 관계 기관 간담회’를 오는 28일까지 연다.

이번간담회는 지도·점검기관인 광주시와 자치구, 시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광주지역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를 비롯해 대기오염배출시설·실내공기질·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토양오염 실태조사, 공공하수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조사사업이나 애로사항은 물론 정책적 연계가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시장상권진흥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재복 전 1918송정역시장 상인회 대표, 전영복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이 1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시장상권진흥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중

합지원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광주시의회 제9

광주시, 올해 상반기 4조3000억 신속 집행

올해 집행액 63% 조기 집행 추진단 구성...집행상황 점검

광주시가 ‘12·3 계엄·내란 사태’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설정하는 등 전략적인 재정집행 총력전에 나서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광주시는 11일 고광안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열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상황과 방향을 공유하고, 신속집행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올해 재정 집행액 6조8000억 원 중 상반기에 63%인 4조3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주요 신속집행 관리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40개 예산 통계목이며, 주요 항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시설비, 재료비, 민간·자치단체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계약 특례와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등에 따라 발주후 계약심사, 입찰공고, 적격심사, 선금 지급까지 통상 65일 소요되는 지급기간을 48일 단축시켜 13일이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회계부서와 협조해 선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매월 기성금 지급을 독려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재정 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는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를 통해 ‘윈윈’으로 뭉쳐 위기의 광주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국가검진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 가능”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전액지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56세에 해당하는 도민은 국가건강검진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도민에게는 확인 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항체 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

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니어도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도민으로,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연말 국가검진 수검자를 위해 신청 기한은 국가검진을 받은 다음년도 3월까지이다.

한편 전남도는 C형간염 고 발생지역인 고흥·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7개 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C형 간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만여 건의 항체 검사를 진행해 ‘확진 검사(RNA) 양성자(30명)에게 검사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했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전남 C형 간염환자는 23.6명(잠정)으로 전국 평균인 12.5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감염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질환”이라며 “예방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한 만큼 C형간염 양성자 확진 검사비 지원이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